2022. 07. 25 벙커 미국국무부

1.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26~28일 방한할 예정이다.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의 도발 동향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식량 안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 긴밀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고 이야기 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당국자가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류샤오밍(劉夫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러시아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지난 22일 전화통화에서 북한 측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대응해야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진정성을 보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역내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제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함께 나아가며, 균형 있게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2. 얼마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북한 노동자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모욕” 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러시아 대사는 북한 노동자는 돈바스의 파괴된 기간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반박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있다는 미국의 기존입장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3. <sixth Annversary of the Philippines-China South China Sea Arbital Tribunal Ruling July 11, 2022>

As I noted in my [**May 26 speech**](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lnks.gd%2Fl%2F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A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jA3MTEuNjA2MTQ0MzEiLCJ1cmwiOiJodHRwczovL3d3dy5zdGF0ZS5nb3YvdGhlLWFkbWluaXN0cmF0aW9ucy1hcHByb2FjaC10by10aGUtcGVvcGxlcy1yZXB1YmxpYy1vZi1jaGluYS8ifQ.DUra_WpguCpeQ6PUYErzpCJyJVeV58jSpHoOddCl0sE%2Fs%2F2576317770%2Fbr%2F138680248710-l&data=05%7C01%7CWMMailbox%40state.gov%7Ce943e8ea017e467a8bba08da6399815a%7C66cf50745afe48d1a691a12b2121f44b%7C0%7C0%7C637931808218588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BjPtNzfJJ8vA%2BsTfxL6i96h3L2geROgyu9IuHr%2FyGmo%3D&reserved=0), the United States and our Indo-Pacific allies and partners are committed to preserving a system where goods, ideas, and people flow freely across land, sky, cyberspace, and the open seas.  This system benefits all countries, big and small.  Preserving a free and open South China Sea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is part of this shared vision.

Six years ago,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delivered a unanimous decision, which is final and binding on the Philippines and the PRC.  In its ruling, the Tribunal firmly rejected the PRC’s expansive South China Sea maritime claims as having no basis in international law.  The Tribunal also stated that the PRC has no lawful claim to the areas determined by the Arbitral Tribunal to be part of the Philippine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This year, the State Department released [**Limits in the Seas No. 150**](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lnks.gd%2Fl%2F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E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jA3MTEuNjA2MTQ0MzEiLCJ1cmwiOiJodHRwczovL3d3dy5zdGF0ZS5nb3Yvd3AtY29udGVudC91cGxvYWRzLzIwMjIvMDEvTElTMTUwLVNDUy5wZGYifQ.2pln6PIjybHaOU6uxYuY24ZHrW7dHj3qmxztiIbvQnI%2Fs%2F2576317770%2Fbr%2F138680248710-l&data=05%7C01%7CWMMailbox%40state.gov%7Ce943e8ea017e467a8bba08da6399815a%7C66cf50745afe48d1a691a12b2121f44b%7C0%7C0%7C637931808218588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oMJzJzSmDGnJ%2FK4wsvoBivmQSZR1CPc%2FdkS8s0y2wk%3D&reserved=0)—the latest study in a series examining coastal state maritime claims and their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law—which examines the PRC’s revised articulation of its South China Sea maritime claims following the issuance of the tribunal’s ruling.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se rearticulated maritime claims remain plainly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States reaffirms its July 13, 2020, policy regarding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We also reaffirm that an armed attack on Philippine armed forces, public vessels, or aircraft in the South China Sea would invoke U.S. mutual defense commitments under Article IV of the 1951 U.S.-Philippines Mutual Defense Treaty.

We call again on the PRC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cease its provocative behavior.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as well as regional institutions like ASEAN, to protect and preserve the rules-based order.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은 국제법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롭고 개방된 남중국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를 위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에 위치한 해역이 휫선 암초에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를 정박시켜 마찰을 빚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대만은 대만해협이 공해라는 입장이고 중국은 자신들에 속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만의 손을 들어주었다.

1982년 해양법의 내용은 심해저를 비롯한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자원의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 간 평화 안전 협력 및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 재판소는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필리핀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중국의 광활한 남중국해 해상 배상 청구를 국제법에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기각했다. 재판소는 또한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구역과 대륙붕의 일부라고 중재 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지역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미 국무부는 연안국 해양청구와 국제법과의 일관성을 조사하는 시리즈의 최신 연구인 '해상에서의 제한 150호'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는 재판부의 판결문 발표에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청구에 대한 수정된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재관절된 해상 청구들이 국제법과 명백히 모순되는 것으로 남아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2020년 7월 13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정책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또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대,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이 1951년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미국의 상호방위 약속을 촉발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규칙 기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같은 지역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